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4년 11월 22일(금)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재섭 사무처장, 042-331-0092/010-9355-3697)

제 목 / 대전광역시 2025년 예산안,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예산 운용 전략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의 불균형,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위한 배려 부족, 축제 및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 강화는 예산안의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 본예산(안) 분석했습니다. 비교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2018년~2024년 본예산 세부내역과 2025년 정부 예산안과 2024년 지방교부금 감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6.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25년도 본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2025년 예산안,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예산 운용 전략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의 불균형,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위한 배려 부족, 축제 및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 강화는 예산안의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먼저, 주민 소통과 공동체 사업의 축소는 심각한 문제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 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 같은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위탁기관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 약화와 시민 참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축제와 홍보 예산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는 0시 축제와 같은 특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비를 크게 증액했다. 시민들의 복지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우선순위 설정이다. 대전시는 축제와 홍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이고,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예산 편성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전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각 사업별 증감액 기준을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고,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 투여가 1, 2년만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넷째, 환경과 사회복지 예산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복지 확대는 지자체가 반드시 우선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 당초 예산안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경

분야는 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2026년 예정된 세계 태양광 총회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관성마저 없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 택시, 화물차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 운영 지원금이 총 1,7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5억 원 감소했지만, 25년도 대전시 교통 및 물류 예산 3,800억 원의 45.2%에 이르러 재정운용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인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년간 지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 공동체 사업을 복원하고, 축제와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을 탈피하며, 과학기술과 환경, 사회복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한다. 민선8기 임기 초 부터 지적받아온 과도한 민자유치 중심의 공약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곧 진행되는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와 조정을 이뤄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2024년 11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 분석 보고서

목차

분석 배경 및 방법 - p2

2025년 정부 예산안 개요 - p4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개요 - p5

2025년 대전광역시 세출 예산 분야별 분석 (12개 분야 -기타, 예비비 제외) - p10

주요 증감 분야 분석 -p15

결론 - p21

분석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과 행정적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권한이다.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대전광역시는 민선8기 이장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총 5대 분야, 87개 사업의 사업비를

55조원으로 발표하면서 무리한 민자유치 욕심과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공약재정은 전임시장들에 5배에 달하는 비용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 규모다. 그러나 이런 무리한 재정계획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적고, 실현 가능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전가 될 것이다. 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대전광역시의 건전재정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2024년에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벌어진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인한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재정 압박은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의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석 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 본예산(안) 분석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2018년~2024년 본예산 세부내역
 - 2025년 정부 예산안과 2024년 지방교부금 감액 추정액
- 비교 분석의 기준과 범위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 주요 부문별 증감 분석 등)

1. 2025년 정부 예산안 개요

1.1 정부 재정 개요

- 2025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7.4조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20.8조 원(3.2%) 증가

정부 예산 총지출(단위 조원)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일반회계	248.8	279.1	296	314.8	350.2	369.4	356.5
	특별회계	47.5	49.8	55.1	60.2	62.8	71.6	81.7
	소계	296.2	328.9	351.1	375	413	441.1	438.3
기금		132.6	140.7	161.1	182.9	194.6	197.7	218.4
합계		428.8	469.6	512.3	558	607.7	638.7	656.6
증감률			9.51%	9.09%	8.92%	8.91%	5.10%	2.80%
전년도 대비 증가액			40.8	42.7	45.7	49.7	31	17.9

<표 1>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정부예산 총지출 연도별 현황

1.2 정부 재정 기조 및 주요 특징

모순적인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문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세수 부족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이러한 조정은 결국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2023년과 2024년에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사태가 발생함. 하지만, 2025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며, 결국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음.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임.

예비비 증가에 대한 우려

2025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4.2조 원에서 4.8조 원으로 약 14.3% 증가

예비비 증액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임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

예비비의 과도한 증액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민주적 절차가 축소될 위험이 존재함.

2.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개요

2.1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

총 예산 규모 및 전년 대비 변화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총 6조6천7백7십억 원을 편성(일반회계 5조 546.983억 원 / 특별회계 1조 13.113억 원)했고, 이는 2024년보다 약 1,441억 원 가량 증가(2.21%)한 금액이다. 회계별 증가액은 일반회계에서 약792.6억 원(1.45%), 특별회계에서 약648.6억 원(6.09%)이다.

2.2 세입 예산 분석

2025년 예산안 세입 총괄표에 따르면, 2024년 본 예산에서 감소했던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회복되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방채 발행 역시 2024년 2,4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700억 원 축소해서 편성되었다. 이는 지방채 한도액이 2,825억 원에서 2,119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2023년 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당초계획보다 1,363억 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2024년 당초 예산안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1,597억 원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다. 올해도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이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대전광역시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2023년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 초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순세계 잉여금은 약 1,7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도 1,7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세출 예산 개요

세출분야	2022		2023		2024		2025		2024년 대비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율(%)
합 계	5,366,837	100	5,477,280	100	5,467,722	100	565,925,127	100	79,261	1.45
일반공공행정	671,812	12.52	591,985	10.81	566,729	10.36	565,925	10.20	13,652	2.47
공공질서 및 안전	215,059	4.01	218,590	3.99	215,011	3.93	223,489	4.03	8,478	3.94
교육	387,311	7.22	306,766	5.6	285,899	5.23	257,838	4.65	-28,060	-9.81

문화 및 관광	238,817	4.45	244,673	4.47	283,779	5.19	289,898	5.23	-3,401	-1.16
환경	266,160	4.96	302,907	5.53	221,764	4.06	171,522	3.06	-50,177	-22.63
사회복지	2,094,215	39.02	2,306,232	42.11	2,515,349	46	2,613,901	47.12	98,592	3.92
보 건	107,374	2	95,133	1.74	89,748	1.64	106,879	1.93	17,177	19.15
농림해양수산	34,940	0.65	109,126	1.99	101,731	1.86	101,235	1.83	153,728	0.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641	7.45	267,486	4.98	195,824	3.58	288,467	5.2	89,635	45.08
교통 및 물류	419,185	7.81	450,905	8.23	438,959	8.03	379,990	6.85	-58,969	-13.43
국토 및 지역개발	168,923	3.15	187,126	3.43	163,361	2.99	163,706	2.95	-3,766	-2.25
과학기술	80,567	1.5	64,585	1.07	72,033	1.32	66,151	1.19	-2,374	-3.47
예비비	24,998	0.47	60,535	1.11	31,589	0.58	22,716	0.41	-10,996	-32.62
기 타	257,836	4.8	271,230	4.95	285,944	5.23	295,259	5.32	9,315	3.26

민선8기 대전광역시 세출예산 추이를 보면 전체 분야별 예산 비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자체의 대응노력이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반대로 [환경] 분야는 예산비중이 3.06%로 감소했다. 2026년 세계 태양광 총회 개최를 위한 국비 예산을 제외한다면 [환경] 분야 비중은 더 줄어든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중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의무비 지출이 큰 요인이다. 대전의 도시 정체성 중 하나인 [과학] 분야 예산 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그에 비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 비중은 민선8기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 예산 4.62% 보다도 [문화 및 관광] 예산 5.23% 비중이 더 높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은 792.6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약 89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률은 45.08%이다.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예비비]로 약 10억 9천만 원 감소했고, 증감률은 32.62%이다. [예비비] 다음으로 감소한 분야는 [환경] 분야로 약 50억 1천만 원, 22.63% 감소했다.

대전광역시 재정운영 방향의 문제

2023년 결산서에 따르면 각 분야별 세출결산에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다수의 항목에서 세출결산이 2022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일반 공공행정]에서 27%, [교육]에서 24%, [보건] 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43%, [과학] 13% 등 세출이 대폭 감소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2023년 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23년 결산서에 따르면, 세입결산 결과 2022년 대비 자체수입에서 6.3%가 감소했고, 지방교부세가 22% 감소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 시민의 삶의 토대가 되는 영역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세출은 대폭 감소했는데, [문화 및 관광] 분야만 22.5% 세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운영 방식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런데 올해도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있을 예정이고, 2025년에도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대전광역시는 2025년 당초 예산안에서, 원론적인 SOC 사업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의무지출 확대만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출 예산의 비중도 문화 및 관광예산 비중이 더 확대되고, 홍보비 예산이 확대되는 등 치적 홍보용 예산만 늘고 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4.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		
			2023	전년대비 (%)	
계	6,716,367	6,930,558	3.2	6,512,253	-6.0
일반회계	5,703,986	5,903,093	3.5	5,498,767	-6.8
일반공공행정	732,500	789,940	7.8	574,961	-27.2
공공질서및안전	513,759	237,205	-53.8	216,759	-8.6
교육	352,864	409,249	16.0	310,329	-24.2
문화및관광	224,250	236,589	5.5	289,948	22.5
환경	200,414	259,144	29.3	252,027	-2.7
사회복지	1,991,044	2,203,766	10.7	2,332,035	5.8
보건	98,848	152,912	54.7	96,857	-36.7
농림해양수산	41,354	43,348	4.8	105,353	143.0
산업·중소기업	586,307	535,050	-8.7	302,817	-43.4
교통및물류	485,215	480,582	-1.0	457,451	-4.8
국토및지역개발	190,448	232,682	22.2	233,995	0.6
과학기술	57,132	84,760	48.3	71,142	-16.1
기타	229,851	237,866	3.5	255,093	7.2
특별회계	1,012,381	1,027,465	1.5	1,013,486	-1.4
공기업특별회계	316,756	285,836	-9.7	288,720	1.0
기타특별회계	695,625	741,629	6.1	724,766	-2.3

2.4 기금 운용 현황

- 19종 합계 7,240억 원으로 2,163억 원(23%)감소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880억 원으로 1,313억 원(31.33%) 감소
- 개별기금 17종은 소액인 과학기술육성기금, 근로복지기금,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7종을 제외한 10종의 기금 감소

3. 2025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 (12개 분야)

3.1 일반 공공행정

- 대변인실 2025년 예산액은 약 58억원 전년도 약 48억 5천만원 대비 19.58%가 증가함
 -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은 '주요시정 홍보 지원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함
- 홍보담당관 예산 역시 소폭(0.87%) 증가
- 법무통계담당관은 전년 대비 4.44%가 감소하였음. 제3차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앞선, 1-2차 연구용역에 비해 1천만원 가량 예산이 축소되었음
-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9.73%의 예산 증가가 있었으며, 사업 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추가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목할만한 지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각각 16.7%, 33.3% 가량의 높은 삭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사업 대비 매우 높은 삭감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 삭감 근거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립적 운영 도모'라 명시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에만 이와 같은 근거가 붙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특히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 사업의 경우, 새마을지도자라는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1억 이상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지원(위령제, 추모제, 기념사업 등) 예산 역시 70% 이상 삭감됨

3.2 공공질서 및 안전

- 시민안전실 2025년 예산액은 약 360억원으로 2024년도 약 378억원 대비 3.36% 감소함
 - 시민안전실 내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자연재난과와 민생사법경찰과의 예산이 삭감되었음
- 안전정책과는 전년 대비 12.03% 예산이 증가하였고,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예산이 증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재해예방과는 전년 대비 3.75% 예산 증가가 있었고, 주요 증가 요인은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해당 사업은 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실시하며,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대상 부서 및 노동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재난과는 전년 대비 17.12%의 예산 증가가 있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 및 비축물품 구입, ‘민방위교육훈련’ 및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사업의 비중이 높음
- 자연재난과는 전년 대비 27.29%가 삭감되었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축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약 58억원으로 2024년 예산 약 54억원 대비 8.67% 증가함
 - 전체적으로 무인단속장비, CCTV설치, 음주단속장비, 자율방범대 비복 등의 물품구매예산은 증가한 반면, 여성범죄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아동 보호,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등의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였음

3.3 교육

- 교육정책전략국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567억 원 증가 했는데, 이는 대학정책과 예산 증가분이 대다수를 차지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국비 대폭 증가함
 -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은 2천만 원 감액된 9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됨
 - 교육예산 전반이 감액된 채로 편성됨

3.4 문화 및 관광

- 문화예술관광국 2025년 예산은 약 1714억원으로 2024년 약 1555억원 대비 10.24% 증가함
 - 부서별로는 문화콘텐츠과가 81.34%로 가장 큰 예산 증가를 보였고, 이어서 문화유산과 30.84%, 관광진흥과 21.10% 순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과는 8.40% 감소하였음
- 문화예술과는 전년대비 8.40%의 예산삭감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이 9.2% 증가
 -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은 대체로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예산들이 대체로 삭감되었음
 - 대전부르스 전국가요제는 0시 축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예진흥원 예산이 전년대비 44.9% 증가함. 지난해 예산이 4월부터 9개월 분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문화예술예산이 동결 및 삭감되는 가운데, 증가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자운대 민·군 화합페스티벌 예산이 100% 인상되었음. 해당사업이 문화예술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의문이 제기됨
- 관광진흥과는 전년대비 21.10%의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음

- 관광자원 창출 예산 증액 3,330,571,000원 가운데,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예산이 전년대비 658.5% 증가한, 3,550,000,000원을 차지하여, 증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관광진흥과 사업 대부분이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0시 축제’ 예산은 4,270,200,00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은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으로, 경우에 따라서 올해도 추경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여기에 ‘대전 K-힙합페스티벌’ 역시 0시 축제 기간이 진행되는 행사이기에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문화콘텐츠과의 예산은 전년대비 81.34%의 높은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인 예산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트 조성’ 사업이 증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물론 해당 예산은 대부분 국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과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5 환경

-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예산이 대폭 삭감됨
- 대기개선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119억 원 감액된 반면 산업단지 환경관리 사업은 12억5천만원, 산림자원육성 3억 4천만 원 등 증액됨
- 기후변화와 관련 예산은 일관되게 삭감됨
- 환경도시 기반구축 1억 8천만 원,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2억 3천만 원,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7억 5천만 원 삭감됨

3.6 사회복지

- 주택정책과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27억 원 증액되었지만, 주거급여 지원 94억원 증액이 주요 요인임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은 19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8억 원 삭감됨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영향임

- 사회복지 예산의 의무지출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노인복지시설·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61억 원 증액되고 20% 증가함
-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 2천 6백만 원 삭감, 양성평등 정책 사업관리 1억 원 삭감으로 각각 45%, 47% 삭감됨

3.7 보건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사업 5억 원 증액
-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8억 4천만 원 감액

3.8 농림해양수산

- 농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54억 원, 산림보호 사업 13억 원, 산림자원 육성 사업 31억 원 감액
- 반면 산림문화휴양증진 사업 36억 원, 농촌지도사업 현장강화 6억 8천만 원, 농식품산업진흥 사업 28억 원 증액
- 증감 기준 확인과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3.9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 기업지원정책과 2025년 예산은 약 283억원 규모로 2024년 대비 약 35억 원 감액됨
 - 기업지원시스템강화는 5억1천만원 증액되었지만,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지원 사업 21억, 특화산업육성 12억, 청년채용활성화 사업 2억 5천만 원이 감액됨
-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은 약 24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83억 원 감액됨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은 90억 원 삭감되었고, 일자리 창출 사업도 11억 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억 원, 우수청년채용 1억 7천만 원, 청년인턴지원 1억 8천만 원 감액 등이 있고, 청년카페 운영 9억 3천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12억 원 증액으로 사업 조정인지, 위탁사업의

확대인지 점검이 필요함

3.10 교통 및 물류

- 교통정책과 2025년 예산 21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9억 원 감액
- 버스정책과 예산 1,151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25억 원 감액
 - 주로 전기버스 구입보조, 저상버스 구입보조, 수소버스구입보조 예산이 삭감된 반면 이장우 시장 공약 사업인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71억 원 증액
 - 대중교통 공적부조 성격의 예산은 감액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난항이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3.11 국토 및 지역개발

- 명품디자인담당관 2025년 예산액은 약 20억 원으로 전년도 약 4억2천만원 대비 372.39% 증가함
 - 증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공공시설물 명품도시디자인’에 신규 책정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10억 원으로 공모 운영비가 1억원 원, 기획디자인 공모 보상금으로 9억 원으로 구성
- 토지정보과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32억 원 신규 편성

3.12 과학기술

- 전략산업정책과 2025년 예산은 약 117억원 으로 2024년 대비 36억 원이 감액된 금액임
- 지역대표산업 육성사업,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 센서 및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반도체 산업육성, SW산업 육성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고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 사업은 각각 34억 원, 14억 원 증액됨
-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과학도시의 미래먹거리 예산의 편성 기준이 구체적 근거가 부재한 채로 단기적 유행이나 일부 국비 사업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4. 주요 증감 부문 분석

4.1 일반 공공행정 - 공동체, 인권 분야 예산 없는 대전시

2025년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1,747억 원으로 전년도 1,662억 원 대비 5.15% 증가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가한 항목들은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이며, 실질적인 사업예산들은 대부분 동결 또는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각각 16.7%, 33.3%로 타 사업대비 높은 삭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지원(위령제, 추모제, 기념사업 등) 예산 역시 70% 이상 크게 삭감되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 삭감 근거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립적 운영 도모’라 명시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에만 이와 같은 근거가 붙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재정 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의 삭감되는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같이 매우 제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2024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 환경교육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종료되었다. 거기에 더해 12월이면 NGO 지원센터도 운영 종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센터들은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공동체, 인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던 센터들이다. 대전광역시는 매년 센터 운영 종료를 결정할때마다, 시청에서 직접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면서 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2025년 당초 예산안에서 공동체, 인권, 환경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일류 경제도시를 끊임없이 표방하지만, 지역을 살아가는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보인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익적 가치에 대한 회복도 엄밀히 심의되어야 한다.

4.2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하여 2025년 시민안전실 예산은 360억원으로 전년도 378억원 대비 3.36%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시설 건립사업 예산 등이 증가하였고, 역시 실질적인 정책사업예산들은 동결되거나 삭감된 경우가 많았다. 관련 시민안전실 내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자연재난과와 민생사법경찰과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세부적으로 안전정책과는 전년대비 12.03%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예산이 증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해예방과는 전년대비 3.75% 예산 증가가 있었고, 주요 증가 요인은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해당 사업은 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실시하며,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대상 부서 및 노동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듯 하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대비 17.12%의 예산 증가가 있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 및 비축물품 구입, ‘민방위교육훈련’ 및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사업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삭감율의 높았던, 자연재난과는 전년대비 27.29%가 삭감되었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축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금년 예산은 5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원 대비 8.67%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무인단속장비, CCTV설치, 음주단속장비, 자율방범대 비복 등의 물품구매예산은 증가한 반면, 여성범죄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아동 보호,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등의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였다.

4.3 문화 및 관광 -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증가하는 축제 예산

2025년 문화예술관광국의 예산은 1,714억 원으로 전년도 1,555억 원 대비 10.24% 증가였다. 하지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제2대전문학관 건립’, ‘대전학발전소 건립’,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트 조성’ 등 시설 건립 및 운영비에 집중되었고, 역시 실질적인 정책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동결되었다.

부서별로는 문화콘텐츠과가 81.34%로 가장 큰 예산증가를 보였고, 이어서 문화유산과 30.84%, 관광진흥과 21.10% 순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과는 8.4% 감소하였는데,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문화콘텐츠과 예산은 대부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트 조성'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콘텐츠 관련 창작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들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8.4% 감소한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은 대체로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예산이 대체로 삭감되었다. 이 가운데 이장우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서예진흥원 예산은 전년대비 44.9% 증가하였다. 물론 전년도 예산이 4월부터 9개월 분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문화예술예산이 동결 및 삭감되는 가운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광 관련 예산으로 관광진흥과 예산은 3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10%인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역시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이나 '컨벤션센터 운영' 등의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예산들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전 0시 축제'의 경우 축제 본 예산은 43억 원으로 동결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은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으로, 경우에 따라서 올해도 추경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리는 꼼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없어보이며, 여기에 2024년에는 0시 축제 기간 중 진행되었던 '대전부르스 전국가요제'나 '대전 K-힙합페스티벌' 역시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별도의 사업처럼 쪼개 놓은 것으로 보인다.

4.4 사회복지 - 의무지출 확대를 제외하면 실질적 복지예산 삭감

2025년 사회분야 예산은 2,613억 원으로 2024년 2,515억 원에 비해 3.92% 증가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취약계층지원, 노동 분야 예산이 감소했고, 기초생활보장,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4.5 교육 분야

2025년 대전광역시 교육분야 예산은 2,578억 원으로 2024년 2,858억 원에서 9.81%감소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2024년 2,775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10.61% 감소하였고, 평생·직업교육예산은 83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16.60% 증가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중 91%를 차지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일부(60%)만 적용하는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은 없다.

4.6 교통 및 물류 -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 교통 및 물류분야 재정지원금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1호선, 택시, 화물차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 운영 지원금이 총 1,7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5억 원 감소했지만, 2025년도 대전시 교통 및 물류 예산 3,800억 원의 45.2%에 이르러 재정운용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인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년 간 지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밀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 2025년도 교통 및 물류분야 재정지원금 실태(단위 / 천원)

교통수단	2025년본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액규모
도시철도1호선 운영 지원	59,934,421	56,547,299	-3,387,122
시내버스 운영 지원	73,386,271	85,220,616	-11,834,345
택시업계 운영지원	13,483,173	13,795,180	-312,007

화물자동차 관리 지원	25,051,500	30,052,000	-5,000,000
계	171,855,365	185,615,095	-20,533,474

4.7 과학기술 - 홀대받고 있는 ‘과학도시’ 대전의 과학기술 예산

2025년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661억 원으로 2024년 685억 원에 비해 3.47% 감소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과학기술연구지원이 3.38% 감소한 626억 원, 과학기술 일반이 5.04% 감소한 35억 원이다. 예산 변동은 국가정책사업 매칭 변화와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일정 수준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산업, 미래성장산업, 나노융합특구, 우주산업진흥 등 2024년의 정책사업이 2025년에 변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에 휘둘리는 지방자치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사업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을 2023년도보다 5.2조 원, 16.6%나 감액 편성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은 명실공히 '과학도시'로서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600억 원에서 800억 원 많게 편성되어 왔다.

문제는 민선 8기 이후 대전시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학도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0억 원이 감액된 646억 원을 편성했고, 2025년에도 8.9% 감소한 662억 원을 반영하며 2022년 예산 805억 7천만 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025년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 예산안 현황(단위 / 천원)

세출분야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	80,567	64,585	24.7% ▼	72,033	10.3%	66,151	8.9%▼

4.8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예산 삭감하는 대전시

2025년 환경분야 예산은 약 1715억 원으로 2024년 약 2217억 원에 비해 22.63% 감소했다. 환경분야 세부 부문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전 부문에서 10%이상의 삭감이 이뤄졌다. 특히 환경보호일반 분야의 환경도시 기반구축 1억 8천만 원,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2억 3천만 원,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7억 5천만 원 삭감이 이뤄지면서, 해당 분야 전체 사업이 삭감된 것과 다르지 않다. 민선8기 대전광역시 최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해외기업 투자 유치 사업 과정에서도 해외 기업들이 국제 표준을 맞추기 위한 RE100 조건 요구가 있기도 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각종 지표로 보면 전력자급률 2.9%로 시도 광역시 중 최하위, 그리고 재생에너지보급률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 뿐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고 있고, 여름철 수해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생태적 전환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도 기대하기 어렵다. 2026년 예정된 세계태양광 총회가 1회성 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개최도시로서 모범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문제와 과제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편성되었지만,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재정건정성 확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과 소통하며 공동체 가치를 확산해 나가던 민간위탁 기관들의 폐쇄에 이어서 공동체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며 시민과의 소통이 약화되었다. 그에 비해 축제와 홍보비의 과도한 증액, 1회성 행사 예산 확대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축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의 축소가 우려된다. 환경 예산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삭감은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예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도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민 복지와 환경,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이야말로 신뢰 회복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